

광주·전남 지급 실태와 문제점

‘자경 증명서’ 한장이면 OK

〈自耕〉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논란으로 촉발된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농도라는 특성상 직불금을 둘러싼 임대농과 부재지주 간의 갈등과 직불금 부당지원에 따른 헬세 누수 등 각종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과 가족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 지원 현황=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쌀소득 직불금으로 17만4천810농가에 1천336억원이 지급됐다. 직불금이 지원된 첫해인 2005년에는 17만9천41농가에 1천156억 원이 지원돼 3년 동안 직불금 수령자 수는 줄었지만 액수는 늘어났다.

광주에서도 지난 2007년 1만6천350농가에 모두 60억7천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만7천887농가에 62억2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상 허점 때문에 부당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매년 각각 110건, 200여 건꼴로 적발됐다.

전남의 경우 2005~2007년 적발된 부당수급 사례는 모두 665건에 2천148만7천 원으로, 대부분 농지를 전용했거나 농지면적을 늘려 직불금을 실제보다 많이 수급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광주시도 같은 기간 334건을 적발했으며, 수령액은 2천만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도 9개 시·군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3개 군에서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음에도 쌀 직불금을 받은 농지전용 사례 등 30건을 적발했다. 부당수급 사례로는 농지 전용이 가장 많았으며 현지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고 직불금만 챙긴 사례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과 광주시 쌀소득 보전 직불금 담당자들이 15일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사무소 관계자와 농민을 상대로 직불제 실태와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부분 농지 전용·면적 늘려 부당 수급

신청·검증기관 이원화... 인력도 태부족

◇탈법 부추기는 허술한 제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전을 위해 쌀소득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지급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재지주가 매년 2월 말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시장·통장 등으로부터 ‘자경 증명서’ 한 장만 받아오면 10월과 이듬해 3월에 걸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다.

또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받도록 되어있기는 하지만,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임대농가는 앞으로도 별 말썽 없이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농지소유자의

직불금 수령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함께 직불금을 신청하는 곳과 검증하는 곳이 지자체와 한국농촌공사로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다.

7~9월 농촌공사 전남본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인력이 17만 명이 넘는 대상자를 상대로 농지전용, 농지형상 유지 등을 점검하느라 부정수급자 적발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제한없이 책정됨에 따라, 규모가 큰 소농농업인 또는 법인에 혜택이 풀리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감사원 발표 직불금 시·도별 중복 수령 현황 (2006년 기준)

지역	인원(명)	지역	인원(명)	지역	인원(명)
부산	167	울산	96	전북	272
대구	111	경기	457	전남	825
인천	883	강원	181	경북	890
광주	140	충북	205	경남	516
대전	13	충남	670	제주	4
계 5,196명					



광주·전남 정·관계도 술렁

수백명 부당 수령... 공무원 상당수 징계 불가피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수령’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관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인의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5일 공무원의 쌀소득 직불금 수령 논란과 관련,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이중 불법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한 징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

망이어서 공무원 사회에 대규모 징계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520명의 공무원이 서울, 과천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총 999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지방 공무원들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관계에서는 이번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동으로 상당수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위 공무원이 아니고 고위성이 없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한다 하더라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라는 오점으로 향후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벌써부터 지역 정·관계에서는 ‘직불금 피답’이 유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고위 인사와 일부 광역의회 의원 등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의 이름도 떠돌고 있다.

광주지역 고위 공무원 A씨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아직까지 관가의 반응은 조용한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인사가 농촌 출신인데다 부모가 물려준 땅이 있다는 점에서 쌀 직불금 파동에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 ‘직불금 책임’ 떠넘기기

與 “盧정부때 생긴 제도... 진상조사특위 구성”

野 “현 정부 인사 도덕 불감증... 이봉화 해임”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만든 제도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직 인사의 도덕 불감증을 비난하고 나서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철저한 조사와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정국운영에 미칠 부담 차단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제도”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4만명의 공무

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육박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이 정부에서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번칙 신청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은 허탈에 빠져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이봉화 보건복지가

장부 차관의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직불금 불법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및 이봉화 차관 해임을 거듭 요구하며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문제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맥)’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쌀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고 환수를 즉시 실시하라”며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즉각 파면과 해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면 승용했다 그래서 7을 만들었다
New Infiniti GT Sedan

Noble Motors GRAND OPEN

062-363-7000

INFINITI